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의한 지역개발접근방식에 대한 고찰: 지역간 협력의 실증적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박 양 호*

〈目 次〉

- | | |
|-----------------------|--------------|
|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 IV. 사례분석의 결과 |
| II. 개념과 이론적 맥락 | V. 결론 |
| III. 연구의 방법과 사례지역의 선정 | |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한 지역개발 방식이 중요해지고 있다. 복수의 지역이 공동의 이해 관계가 있는 사업을 상호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추진하게 되면 한정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참여하는 지역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게 됨으로써 지역갈등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어 국토의 통합적 발전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히 지방분권화 시대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고립적 지역발전을 탈피하고 생산적 지역 분권화가 내재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간 협력을 통한 개발방식이 중요할 것이다. 한국에서 지역간 협력을 통한 지역개발방식을 도입하고 진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간의 성공적 협력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지역간 협력을 통한 지역개발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일부 이뤄진바 있다. 이에는 한표환·김선기(2003), 최용환(2003), 이종화(2003), 김용웅(2001), 박우서(1997) 등의 연구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주로 지역간 협력적 개발방식의 필요성과 추진동기와 요소, 그리고 이론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들 논문을 통해서도 지역간 협력적 개발방식이 작동하는 메커니즘과 협력방식의 성공시스템과 부진(不振) 시스템을 알아볼 수 있는 실증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의 한계를 다소나마 극복하기 위해 지역간, 특히 지자체간 협력사업의 성공과 부진상태에 이르는 실증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간 협력의 개념과 관련 이론적 맥락을 살펴본 다음, 한국에서의 사례분석을 통한 방법론에 기초하여 지자체간 지역개발협력의 메커니즘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개념과 이론적 맥락

1. 정의와 범위

본 연구에서 말하는 ‘지자체간 협력’이라 함은 “서로 다른 자치단체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개발 관련 활동을 체계적인 상호협동을 통하여 추진하여 이익을 공동으로 창출하고 공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간 협력사업의 범위를 지자체가 통상 추진하는 활동 중에서 지역개발 관련 활동부문에 국한하였다. 따라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협력사업은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이론적 맥락

지역개발부문에서의 지역간 협력과 관련한 이론은 다양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체간 ‘협력’ 과 관련한 몇 가지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기업경영에서의 활동공유 모형이다. 기업경영에서 활동을 공유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주체들이 수행하는 사업간의 연계에서 오는 이득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더 크기 때문이다. 기술 및 경쟁기법의 발달로 수많은 사업간에 연계가 형성되고 이것이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다. 기업은 활동의 공유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는 또다시 원가절감 → 설비활용의 효율성 증대 → 학습곡선의 변화라는 연쇄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기업간의 활동공유를 통해 차별화의 잠재력이 증대되고 경쟁우위가 변화된다.

둘째는 파트너십 모형이다. 파트너십은 주체간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행위 또는 조직형태를 의미한다. 파트너십에는 몇 가지의 기본원칙이 존재한다. 즉 파트너십의 참여자는 협력활동에 있어서 협정이나 계약 등에 의거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다는 원칙이며 또한 공동의 목표를 위한 활동경비를 협정에 따라 참여자간에 분담한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파트너십의 참여주체는 주어진 역할에 상응하는 이익을 향유한다는 것이다.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동기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재정적·인적자원 획득기회의 증대, 다양한 문제점의 해결 능력 향상, 정치적 이익의 증대, 불확실성의 감소,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의 힘 증가 등이 원인이 된다. Segil(1996)에 의하면 파트너십은 경쟁우위를 얻는 중요한 도구로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업이 새로운 강점을 개발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으로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핵심목표가 되며 이를 위해 전략적 제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략적 파트너십은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위험과 비용을 관리하여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한 후 시장점유율을 단기간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는 ‘연결의 경제성’과 ‘통합형 분업이론’이다. 각각의 지역이 갖고 있는 내부자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고 연결시킴으로써 생겨나는 경제성을 연결의 경제성이라고 한다. 연결의 경제성은 복수주체가 존재하고 복수주체간의 연결이 지식, 정보, 기술 등에 다중이용에 의해 유발되는 경제성이다. 연결의 경제성은 통합형 분업이론의 기초가 된다. 종래의 지역개발 형식은 개별지역이 중심이 되고 다른 지역은 수요·공급의 입장에서만 존재하는 ‘분리형 분업’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반면에 ‘통합형 분업’은 지역간 협력·제휴에 의한 새로운 지역개발방식이다. 이는 여러 주체가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통합적 지역으로 바뀌면서, 통합적 지역간에 새로운 연계가 맺어지고, 통합적 지역 내에서 또한 개별지역간에 고도의 연계가 맺어져 다양한 시너지효과가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분리적 분업에서 통합형 분업으로 발전한 전행은 2차 대전 이후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인식에서 출발하여 1970년대에 관세동맹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1993년 1월 1일 단일시장을 출범시키는 등 상당한 경제통합을 달성하고 있는 유럽연합을 들 수 있다.

Ⅲ. 연구의 방법과 사례지역의 선정

1. 연구의 방법

지자체간 협력방식을 통한 지역개발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례분석방법이 요구된다. 협력사례 분석을 위해서는 지자체간 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인과요인 도출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지역개발분야에서의 지자체간 협력사례 자료 수집이다. 지자체간 협력사례로는 산업입지, 관광, 교통, 수자원, 환경,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기초지자체간 협력사례, 광역 및 기초지자체간 협력사례를 포함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집된 지자체간 협력사례 유형화이다. 유형화는 성공사례와 부진사례로 나누고 아직 성공인지 부진인지 판명이 어려운 유형을 포함했다. 세 번째 단계는 협력사업의 진행단계별로 협력의 성공과 부진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의 진행단계를 발의(I: Initiation) — 계획(P: Planning) — 집행(I': Implementation) — 이익공유(B: Benefiting)의 4단계로 구분하여 협력단계별 인과관계를 규명코자 했다. 네 번째 단계는 유형별 협력메커니즘의 도출이다. 각각의 구체적 사례들을 종합하여 협력에 관여하는 핵심요소를 찾아내고 협력요소간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성공메커니즘과 부진메커니즘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런 절차에 따라 특히 각 협력의 진행단계별 중요 핵심요소와 관련하여 주요행위자, 주로 관련 공무원과 관련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한 질의 응답방식에 근거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인과관계를 규명코자했다. 즉 협력사업의 발의단계(I)에서는 협력사업의 동기, 협력대상, 최초 발의자, 호응정도, 지역여건, 발의 형태, 주요 참여자, 제3자의 역할, 애로사항 등을 주로 파악했다. 이어 계획단계(P)와 관련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 유무, 계획 수립 기관, 계획수립관련 비용 분담, 계획 내용, 참여기관 내외의 행태 등을 조사했다. 이어 집행단계(I')와 관련해서는 참여 지자체들의 상호협조, 중앙정부의 지원 내용과 관심정도, 집행과정상의 행정·재정적 어려움 등을 파악했다. 마지막 단계인 이익의 공유단계(B)에서는 이익의 성격 및 내용, 이익 공유 방식 및 공유정도, 이익공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여부, 이익에 대한 만족도 등을 주로 파악했다.

2. 사례지역의 선정과 현황

본 연구에서 사례분석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위해 몇 가지 기준을 적용했다. 첫째, 협력분야 측면에서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지자체간 지역개발 협력사업으로서 문화관광, 산업개발, 환경, 인프라 사업을 선정하였다. 둘째, 협력주체 측면에서 광역지자체간, 기초지자체간, 광역-기초간 협력사업이 모두 포함되도록 선정하였다. 셋째, 진행단계 측면에서 발의-계획-집행-이익공유의 진행단계에서 각 단계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사업이 포함되도록 선정하였다. 넷째, 추진상황 측면에서는 성공사례, 부진사례, 그리고 협력속에 진행중인 사례가 모두 포함되도록 하였고, 다섯째는 지역별로 상징성과 대표성을 지니는 사업으로서 타지역 지자체간 협력사업의 선정과 추진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코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기준을 따라 1998-2004년 중에 시작된 9개의 사례분석 대상사업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① 영호남 화합의 남도대교 건설사업, ② 전북-전남 기초지자체간 장수벨트화 사업, ③ 대구시-경북도의 한방산업 육성, ④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 ⑤ 서울시 구로구-경기도 광명시 환경기초시설 빅딜사업, ⑥ 충남-전북 관광분야 교류협력사업, ⑦ 강원-경북-충북도의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계획수립, ⑧ 강원도 기초지자체간 탄광지역 균형발전 협력사업, ⑨ 민족의 젖줄 한강 700리 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조사대상사업의 현황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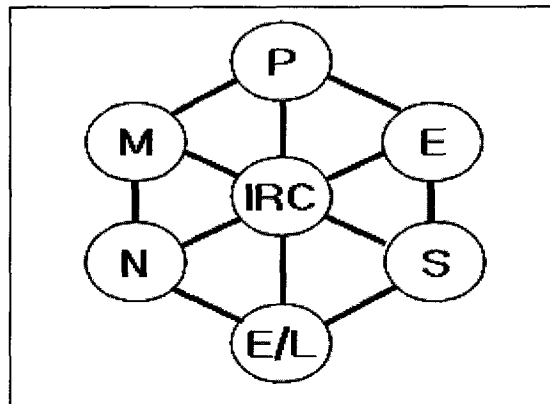
Ⅳ. 사례분석의 결과

1. 핵심요인의 도출

사례조사 결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6가지 핵심요인이 도출되었다. 지자체간 협력(IRC: Inter-Regional Cooperation)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요인으로는 파트너십(P:

〈표 1〉 사례분석 대상사업과 관련 현황 요약

사업명	부문	참여주체	진행단계	추진상황	사업기간
남도대교 건설사업(1-1)	인프라	전남, 경남	이익수수단계	성공사례	1998.10~ 2003.7
장수벨트화 사업(1-2)	문화 관광	순창, 구례, 곡성, 담양	계획단계	협력속에 추진중	2003. 2~
한방산업 육성(2-1)	산업	대구, 경북	계획단계	협력속에 추진중	2003~2016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2-2)	산업	대구, 경북	발의단계	교착상태	2004~2015
환경기초시설 빅딜(3-1)	환경	광명시, 구로구	이익수수단계	성공사례	1998.3~2000.7
충남-전북 관광분야 교류협력사업(4-1)	문화 관광	충남, 논산, 금산, 부여, 전북, 익산, 진안, 무주	집행단계	협력속에 추진중	2002. 10~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계획수립(5-1)	기타	강원, 충북, 경북	계획단계	협력속에 추진중	2000. 3~
탄광지역 균형발전 협력사업(5-2)	문화 관광	태백, 정선, 삼척, 영월	집행단계	교착상태	1996. 8~
민족의 것줄 한강 700리(5-3)	문화 관광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집행단계	협력속에 추진중	1998. 11~



〈그림 1〉 지자체간 협력의 6가지 핵심요소

Partnership) 요소, 동기부여(M: Motivation) 요소, 네트워크(N: Network) 요소, 열정 및 리더십(E/L: Enthusiasm and Leadership) 요소, 지원(S: Supports) 요소, 외부(E: External) 요소 등이 중요했다.

(1) 파트너십(Partnership) 요소

인접한 지자체가 수평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각 단계별로 역할을 분담할 경우 협력사업은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가령 남도대교 건설사업의 경우 전남도와 경남도가 영·호남 화합대교 가설 협약서를 체결하여 추진하였는데, 발의단계는 물론 계획, 집행, 이익공유의 전 과정에서 참여주체간에 수평적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그 관계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동기부여(Motivation) 요소

지역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동기부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주로 발의단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형태는 다양한 경향이 있다. 남도대교사업은 영호남 화합을 통한 영호남간 지역갈등 해소라는 상징성이 중요한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장수벨트사업은 낙후되어 가는 지역을 관광개발을 통해 공동으로 발전시키자는 지역사회의 동기가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네트워크(Network) 요소

지역간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주체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매우 중요한데, 네트워크의 형태는 다양하며, 지자체간 협력사업의 경우 각종 협의회 형태가 중요한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을 지닌다. 기존에 형성된 참여주체간 협의채널이 네트워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도대교 건설사업의 경우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요 의제를 발의하고 토론하는 주요한 공간을 제공하였고, 장수벨트사업에서는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와 지리산권 자치단체장협의회가 그 역할을 하였다.

(4) 열정과 리더십(Enthusiasm & Leadership) 요소

지역주민의 열정과 지사, 시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또한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령, 남도대교사업은 발의단계에서 사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강력한 염원과 전남도지사의 리더십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으며, 계획 및 집행단계에서도 전남도는 경남도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이다.

(5) 지원(Supports) 요소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외에 지역의 국회의원, 지방의회,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제3자의 지원 여부도 협력사업 성공의 필수적 요소였다.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역주민들이 사업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남도대교)하거나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사업비 확보(남도대교)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구로구-광명시 환경빅딜의 경우 광역시·도 의회, 시청, 시민단체의 지원과 시민 참여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한 사례도 있다. 가령, 남도대교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집행단계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었다.

(6) 외부(External)요소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내부적 요인 뿐 아니라 여론의 형성, 사회적 분위기 등 외부적 요소도 중요하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협력사업을 촉진시킨 사례로는 남도대교사업이 해당된다. 당해사업의 지역 주민들간에는 역사적 지리적 정서적 근접성, 상호의존성이 존재해 왔으며, 사업의 필요성은 있었지만 추진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영호남 지역의 화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업이 발의되고, 예산의 지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사업이다. 사회적 풍조 또는 유행이 지역간 협력사업의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며 또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이 협력사업의 계획수립, 입지선정, 협상, 사업추진 등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기도 했다.

2. 성공과 부진의 메커니즘

(1) 성공 메커니즘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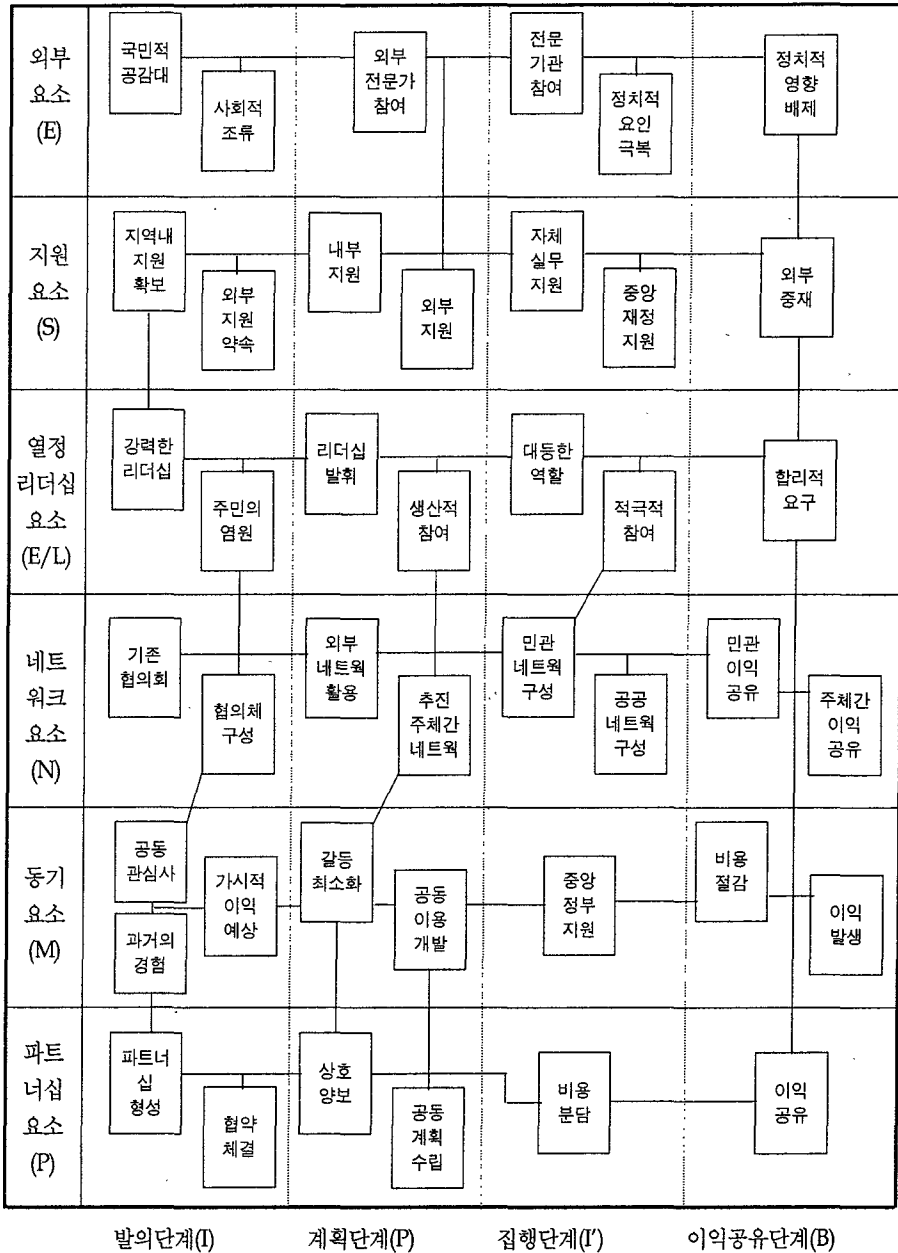
사례조사를 통해 밝혀진 지역간 협력사업의 성공 메커니즘을 요약하면 <그림 2>와 같다.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간의 공동의 이해관계이다. 지역간에 공동의 필요성 및 이해관계를 인식하고 사업을 추진한 경우 사업이 원활히 진척되었으며, 상호편익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한 사안에 대해 협력 파트너들이 동일한 상황인식 및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공동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사업의 발의단계에서부터 합의형성이 용이하였다.

둘째, 사업의 성격과 기대효과이다. 대상사업의 비용 및 이익의 균등(적절)한 배분이 가능하고, 사업의 성격이 명확한 경우 활성화가 용이하다. 충남-전북 관광 협력사업은 하천, 산지, 역사문화·관광자원 등 공동의 관심 테마를 이용한 관광상품 연계 개발 및 홍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셋째, 추진주체의 리더십과 열정이다. 지자체장의 리더십과 인식, 담당공무원의 열정과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한 추진 동인이 되고 있다. 또한 파트너간의 수평적 관계를 토대로 선도 지자체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경우도 원활하게 진척되었다.

넷째, 주민참여 및 지원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지역출신 정치인, 학계, 주민 등의 지원이 결합되면 사업추진이 가속화 되고 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주민성향은 공동협력의 활성화에 중요하며, 지역주변의 여건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공동사업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이 증대될 경우도 사업의 추진이 용이하였다.

다섯째, 파트너간의 신뢰이다. 수도권행정협의회, 시도지사협력회의,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의와 같은 상설적인 의사조정 채널이 존재하여 사업 파트너들간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와 지리산권 자치단체장협의회 등 과거의 협력경험을 통해 협력 파



〈그림 2〉 지자체간 협력사업의 성공 메커니즘

트너간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한방산업육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공동기획단 운영, 포럼 개최, 국비 확보 등도 공동으로 추진한 사례이다.

여섯째, 중앙정부의 지원이다. 중앙정부의 협력사업에 대한 국고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는 지

역간 협력사업의 활성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곱째, 사회적 관심이다. 노령화사회의 도래와 삶의 질(well-being)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확산되어 장수벨트사업, 관광협력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며, 남도대교사업의 경우 영호남 지역의 화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사업에 대한 대외적 관심을 증대시키게 되었고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하였다.

(2) 부진 메커니즘의 경우

반면에 본 연구의 사례조사를 통해 밝혀진 지역간 협력사업의 부진 메커니즘을 요약하면 <그림 3>과 같다. 이 부진메커니즘을 설명하는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조정외의 취약이다. 관련 지자체의 주민간 갈등과 마찰이 발생하고, 지역행정기관의 주민 조정, 조율 능력이 미흡한 경우에 부진요인이 된다. 특히 입지결정과 같이 지역간 이해관계가 민감한 분야에서 합의도출이 매우 어려우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또한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큰 사업의 경우(이익과 손실이 어느 일방에만 발생하는 경우)와 이익의 적정한 배분이 당초부터 곤란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 이견조정이 곤란하다. 그리고 지방정부, 지역주민, 지방의회, 시민단체 사이의 갈등 해소 및 합의형성을 위한 지역의 조정, 협상 능력이 미흡한 경우에도 부진요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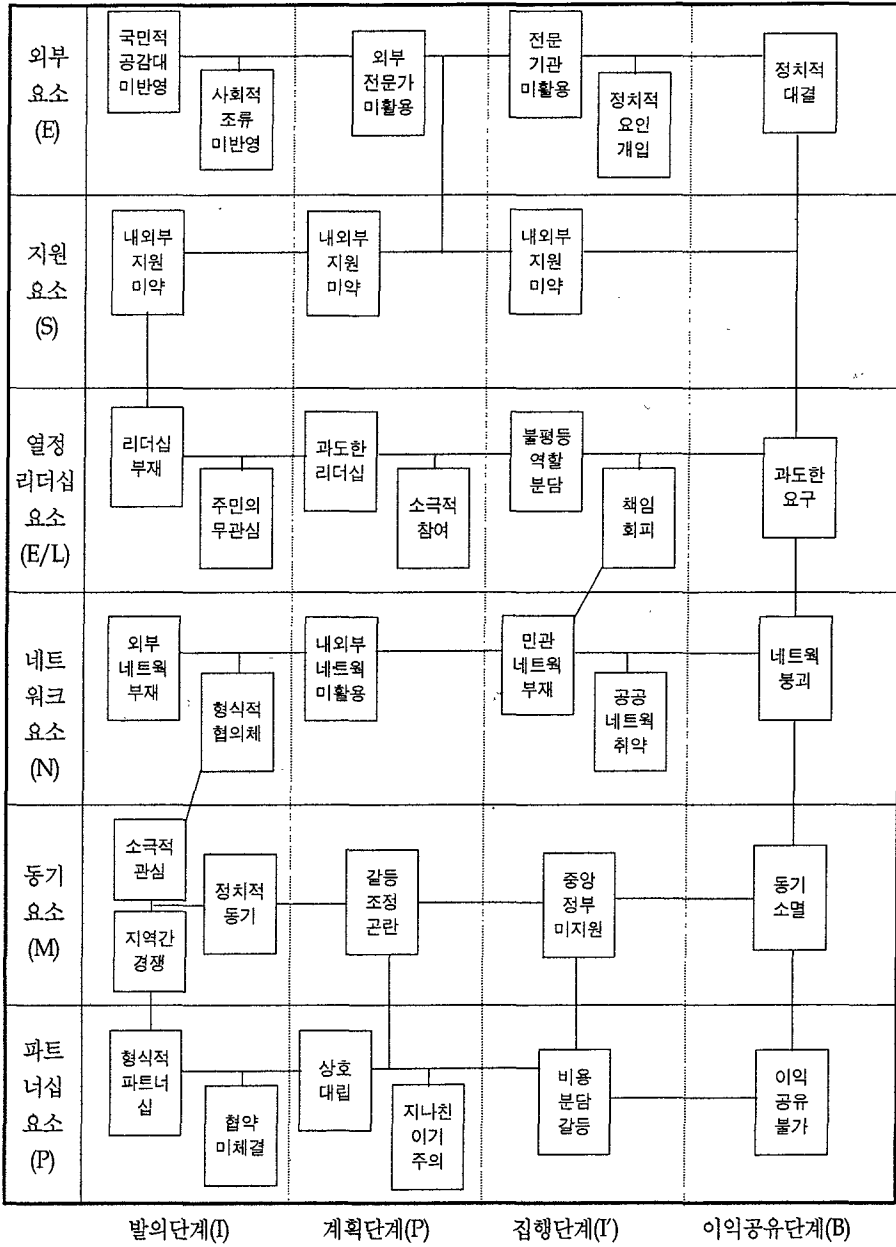
둘째, 재원확보의 결여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안건이 제안되고 있으나 공동사업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안 될 경우 사업집행이 지연되거나 사업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의 재정구조가 취약한 현실상황에서 국가사업으로 책정되지 않을 경우 일부 자체(시법)사업을 제외하고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 상당수 존재한다.

셋째, 상대방에 대한 신뢰 부족이다. 상대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경우 불필요한 감정이 개입하게 되어 사업추진은 방향성을 상실하고 사소한 문제로 인해 전체 사업이 표류하기도 한다. 그리고 상대지역의 발언권 약화 시도, 들러리 세우기, 무임승차 비난 등 상호간 신뢰가 저하되는 경우도 사업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넷째, 정치적 주도권 대결도 사업추진을 어렵게 만든다. 정치적 고려를 중시하는 민선단체장은 지역개발사업을 지역간 협력보다는 독자적 추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민선단체장이 협력사업의 상대지역에 양보하기보다 자신의 이익만 고집하게 되면 실무적 차원에서 합의도출이 곤란하며, 사업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심할 경우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게 된다.

다섯째, 폐쇄적인 지방행정 관행도 협력사업을 어렵게 한다. 행정구역 단위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기존의 지역개발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할 경우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사업의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협력사업 결과로 조직이 축소되거나 위상이 저하될 경우 해당부서는 권한 축소 등을 우려하여 지자체장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다.

여섯째, 협력사업에 대한 정보부족도 지역간 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협력의사가 있어도 어느 지자체가 협력가능사업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인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협력사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림 3〉 지자체간 협력사업의 부진 메커니즘

5.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지자체간 협력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요인으로는 파트너십 요소, 동기부여 요소, 네트워크 요소, 열정 및 리더십 요소, 지원요소, 외부요소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았다. 지자체간 협력사업이 진행되는 각 단계별로 이들 요소가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협력 사업이 부진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협력 사업별로 그리고 협력단계별로 인과요인들을 연계하여 보면 지역간 협력 메커니즘이 도출된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지역 협력메커니즘은 각각의 인과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지자체간 공동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지를 파악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사업의 진행 단계별로 협력의 성공과 부진을 결정짓는 요소를 찾아내고 이들을 종합함으로써 한국형 지역간 협력모형을 도출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자체간에 다양한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기반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역 간 협력을 통한 한국형 지역발전모델을 찾기 위한 하나의 조그마한 시도에 불과하다. 본 연구에서의 사례는 극히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고 지역개발의 복잡성을 커버하기에는 방법론도 너무 단순하다. 향후 보다 다양한 지역협력사례를 국내외에서 발굴하고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하여 분석하는 동시에 그 기초가 되는 더욱 심화된 적정 이론이 개발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김용웅, 2001, 지역간 연계·협력의 이론적 배경과 발전방향, 이정식·김용웅(역음), 세계화와 지역발전, 서울: 한울.
- 박양호 외, 2003,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간 공동발전 연구(I), 안양: 국토연구원.
- 박우서, 1997, 지방정부간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지역간 갈등의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32권 제3호.
- 신창호, 2001,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대한 제도와 사례," 도시문제, 2001년 8월호.
- 이중화, 2003, 지방분권시대의 지역간 협력·제휴, 지방분권형 국가만들기, 서울: 나남.
- 최용환, 2003,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간 협력방안, 국토연구원·충북개발연구원 공동위약, 지역중심의 국토발전전략(2003. 10. 17).
- 한표환·김선기, 2003,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유형별 성공·실패요인 분석과 추진방안,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3호.

- 한표환, 김선기, 2003,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유형별 성공 실패요인 분석과 추진방안,” 한국 행정학보 제33권 제3호.
- Cappelin, R. 1993, “Interregional Cooperation in Europe: An Introduction.” R. Cappelin and P.W.J. Batey (eds.), *Regional Networks, Border Regions and European Integration*, London: Pion Ltd.
- International Working Party-West Zone, 2001, ERDF 2000-2006 Community Initiative Programme INTERREG III C West Zone.
- McDonald, B., 2004, *Interregional Cooperation and the UK, with emphasis on the Thames Gateway Growth Area*, 국토연구원 제출보고서.
- Segil, L. D., 1996, *Intelligent Business Alliances: How to Profit Using Today's Most Important Strategic Tool*, Random House Inc.